

보도 일시	2023. 2. 27.(월) 10:00 2023. 2. 27.(월) 석간	배포 일시	2023. 2. 27.(월)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87)
		담당자	서기관 최승훈 (044-202-7604) 사무관 김영수 (044-202-7602)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 첫 제시

－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

-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 적정 기성금 지급, 에스프로 결제 활용 등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약속

2023. 2. 27.(월)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로,

중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는 달리,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8장(章)*, 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공정과 연대의 실천,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이행평가 및 정부 지원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 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를 의미,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 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종사자 대상 임금 지급시 원청 확인 후 지급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❷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여,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③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④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오늘 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 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밝히며,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동형이엔지 대표)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1.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 붙임2. 주요 추진 경과
- 붙임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붙임4.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전문
- 붙임5.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 개요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상생과 연대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총 27개 실천과제로 구성

전문가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 마련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법 마련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를
최소화 합니다

원청
적정기성금
지급 + 하청
임금인상을
제고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합니다

특정 공정에 우선 적용
+ 정부는 적극 지원

3 임금체불을
예방합니다

에스크로 결제 제도*
적극활용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

4 일자리의 질을 제고합니다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 최소화
→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협력사 등으로 전환

5 보험료 지원방안을 모색합니다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지원 모색

+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

□ '22.10.17.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 '22.11. 9. 「조선업 상생협의회」 발족 · 운영

* 조선업 상생 협약 마련과 이행을 위한 논의 틀로, 조선 5사 원·하청사(각 5명), 전문가(7명), 조선협회, 관계부처(고용·산업·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총 24명 참여

□ '22.11.~'23.2. 조선5사 원하청 노·사 및 자치단체 현장 방문(19회), 협약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6회) 실시

〈현장방문 내용〉

일 시	지역	방문 대상
'22.12. 5	울산	현대중공업 원청·사내협력사·원청노조·하청노조
'22.12. 9	울산	현대미포조선 원청·사내협력사
'22.12.12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원청·원청노조·하청노조
'22.12.13	거제	삼성중공업 원청, 대우조선해양 원청·하청노조
'22.12.14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대불공단 협력사
'22.12.20	거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원청노동자협의회
'22.12.22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하청노조
'22.12.28	부산	자치단체(울산시, 경남도, 거제시)
'23. 1. 4	목포	자치단체(전남도, 영암군, 목포시)

○ 그 외, 협의회 운영 · 의제정리 내부회의(14회), 전문가 검토 회의(6회), 관계부처 회의(기재 · 산업 · 공정위, 2회) 등 실시

□ 장관, 조선업 전문가 간담회('23.1.11), 울산지역 조선 원 · 하청 대표 간담회('23.2.6) 등을 통해 상생 협약 체결 당부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에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 이번 상생협약은 오랜 기간 상호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조선 원청과 하청이 서로를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첫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가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협약 체결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의미가 큼니다.

- 이번 협약에는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등
원하청이 함께 노력하여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

- 에스크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방안,

*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어진 계좌를 의미, 원청이 기성금 지급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 하청이 종사자 대상 임금 지급시 원청 확인 후 지급

-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활용을 줄여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
27개나 되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 앞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하청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행에 대한 평가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여,
여건이 안 되어 부족한 부분은 협의하여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도 수정하는 등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고민하며 애써주신
원청과 하청, 협회 관계자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조선업, 나아가 우리 노동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정부도 적극 화답하겠습니다.

- 이미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조선업에 특화된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국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1년 만기시 연 600만원 지급(근로자 부담 150만원)

- 이에 더해 근로자들의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 확대 등
- 임금-복지-훈련-안전 등 쏠 영역에 걸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조선업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에도 원하청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업종을 선정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정지원이라는 손쉬운 수단에서 벗어나, 원하청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전제로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 모든 과정을 매뉴얼화하여 노동시장과 산업정책에 활용하겠습니다.

□ 지난해 10월 조선업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당시
원청 5개사만 참석했으나,
오늘 협약식에는 하청까지 함께 하여 상생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이것으로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시작입니다.
- 조선업 상생모델은 상생과 연대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첫걸음이며,
-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하청이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으로
대화와 타협에 기반하여 상생과 연대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원하청은 함께
협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보다 발전시켜
현장의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추후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보다 큰 틀의
상생협의체 구성도 기대하며,
-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과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I. 전문 :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원·하청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에서 원·하청 상생협력이 되지 않으면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숙련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출범되었다. 조선업의 원·하청 간 상생 전략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조선업의 원·하청 협력체제는 전문·효율적인 협력업체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 조선업 불황기에 어려움을 겪어온 협력업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이유이다.

둘째,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숙련인력의 육성·유지가 중요하다. 협력업체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선업계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도 적극 호응해야 숙련인력을 유입, 육성, 유지할 수 있고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노동인구의 감소와 제조업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를 감안할 때 외국인력의 활용전략도 바꿀 필요가 있다. 주요 핵심 업무는 내국인 중심으로 하고 비핵심 업무는 외국인 비중을 확대하되, 체계적인 인력 활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협력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선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 원청과 하청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조선5사와 협력업체, 자치단체,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이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다. 또한 원·하청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II. 공정과 연대의 실천

노동시장 내 고용·임금 격차로 인해 조선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원·하청은 노동시장 내 공정과 연대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숙련인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

1. 조선5사는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상응하여 기성금(인건비와 시수 등)에 반영한다. 업황이 개선되는 향후 5년간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임금 인상률, 기성금 단가 인상률, 사내 복지 등)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에 상응하여 협력업체 종사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며, 이에 대해 상생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또한,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의 최소 기준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2. 조선업계는 일의 가치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임금을 실현하고, 임금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다.
 - 정부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임금 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3. 조선5사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협력업체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 업체도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에 협력하여 단계적, 전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확대 운영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도록 한다.
4.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의 출연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정부도 지원한도 인상 및 지원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Ⅲ.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조선업 불황기 이후 일부 협력업체는 4대 보험이 체납되는 등 원만한 생산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1. 조선5사와 정부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영위를 위해 협력업체의 4대 보험 체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협력업체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협력업체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정부 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하도급법상 관련 규정과 상생협력법(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 또한,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근거하여 투명한 하도급 운영과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예: 노무비의 산정근거 등).
3.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나온 성과를 공유하도록 상생협력법상 성과공유제* 등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
 - 정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여 건강한 조선업 생태계의 구축과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4. 조선5사는 협력업체의 경영 및 생산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업체의 전문화와 관리능력 제고를 지원한다.
 - 정부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

IV. 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조선업은 그간 양질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조선업체들은 보상으로 화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선업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황 개선을 계기로 인력 확보와 숙련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원청과 협력업체는 인식을 같이 한다.

1. 숙련 인력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직영 생산직을 조선사별 상황에 맞추어 일정 규모 유지·확대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사내협력사 장기 근무자의 직영 채용, 지역 인재 채용 등 조선사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경로를 열어둔다.
 - 다만, 조선5사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되, 협력업체와 원만히 협의 후 시행한다.
2.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합의하며, 이를 위해 재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소 5년 간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하도급의 사내협력사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또한, 협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내협력사 전환 목표 및 방식 등을 상생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한다.
3.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청년인력 확보와 함께 여성 및 고령인력을 조선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화고 및 폴리텍대학과 적극 연계하고, 자동화 설비 투자 등으로 노동강도와 산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들을 발굴하여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을 모색한다. 특히 조선소 정년 퇴직자들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므로 생산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3-1. 정부는 조선업으로의 인력유입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지역 특성화고·폴리텍대학과의 연계 지원, 여성·고령인력 적합직무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조선5사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 특히, 자치단체와 함께 신규 입직자 대상의 공제사업 운영 및 초기 취업정착금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 또한, 취업지원 허브 신설, 조선업 특화 채용 박람회 개최 등 필요 인력의 신속한 유입을 지원한다.

4. 조선5사는 사내 기술교육원을 활용하여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1. 정부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조선5사 사내 기술교육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또한, 조선 분야 근로자들이 조선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이·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맞춤형 특화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 더하여 특수용접 등 조선업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제공을 위해 지역 폴리텍을 통한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 아울러 협력업체의 훈련수요와 직무특성을 진단하여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와 운영을 지원하고, 필요시 협력업체 스스로의 직업능력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 이 외에도 협력업체 핵심인재의 장기근속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협력업체 채용예정자 등이 기술연수원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훈련참여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지원한다.

5.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조선업 생산기능직 인력확보를 위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의 다양한 취업 인센티브 제도를 조선업 실정에 맞게 재정비해서 운영한다.
 -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기숙사 임차료 및 교통비 지원, 휴게실·샤워실·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한다.
6.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외국인력 배치, 교육훈련, 재해예방 등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조선5사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수준 및 기업의 수요에 따라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 조선5사와 협력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또한, 정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V.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 법률 및 규정의 철저한 준수,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1.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상 의무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 신규 및 외국인력 유입에 대비하는 산업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해 원·하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조선업의 특수적인 위험요인 파악 및 공동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정부는 산업안전 장비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원·하청의 상생협력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2.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상호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 및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노사 상생을 통한 안전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 정부는 조선업의 생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여 적정한 RG(선수금 환급보증)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산업재해의 발생 등이 없도록 기초질서 확립에 동참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 또한,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작업장 내부에 깨끗하고 충분한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
4.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작업량의 변동에 대응하되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면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5. 조선5사와 협력업체, 협회, 자치단체와 정부는 조선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선된 상황과 희망찬 미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상호 협의 하에 마련, 시행한다.
 - 정부는 이를 위한 운영비 등을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VI.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조선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5사와 협력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그리고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여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창출한다.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노사민정 협력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 정부는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선5사는 적극 협력한다.
2.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산업 또는 지역 단위의 원·하청 상생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선업의 미래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운영방식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VII. 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은 장기과제를 통해 조선업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1. 조선5사와 협력업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기성금 지급 기준과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조선업 기성금 개선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2. 조선5사와 협력업체, 정부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선업 미래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도록 한다.

VIII. 이행평가 및 정부 지원

1. 조선5사, 협력업체는 협약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하청 공동 협의회 등은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2.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5사와 협력업체의 참여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붙임5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 2. 27.(월) 10:00~ / 현대중공업 영빈관 1층 아산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 참석자(17명)

- (정부·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 (국 회)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 (상생협의회) 조선5사 원하청 대표 등(각 5명), 전문가(3명) 등

▲ (원 청)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
신현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 (하 청)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동형이엔지 대표)
김수복 삼성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척추산업 대표)
최병술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자오기업 대표)
전영길 현대미포조선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대영전력 대표)
김병수 현대삼호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다운산업 대표)

▲ (협 회)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 (전문가) 배규식 박사, 박종식 박사(노동연), 양승훈 교수(경남대)

□ 주요내용 :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공개
10:00~10:03	3'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10:03~10:05	2'	▶ 개회	사회자	
10:05~10:10	5'	▶ 인사 말씀	장 관	
10:10~10:16	6'	▶ 축하사	권명호의원, 울산시장	
10:16~10:21	5'	▶ 상생협약 체결 경과 및 주요내용 설명	박종식 박사	
10:21~10:50	29'	▶ 협약 체결 (서명 후, 소감 말씀)	참석자 전원	